

청년엔 선별적 반값등록금·노년엔 ‘효도법’

새정치, 내년 총선 대비 세대별 맞춤공약 개발

선대위 초기 구성 등 공천 싸고 계파간 신경전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노년층을 각각 겨냥한 ‘세대별 공약’ 개발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전통적 지지층인 젊은층은 물론 약세를 보였던 노년층의 표심도 동시에 끌어당기는 맞춤형 ‘투트랙’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세대로 분류되지만 최근 급격한 보수화 성향을 보이며 지지세 이탈이 가시화한 청년층을 우선 조준하고 있다.

실제로 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는 최근 ‘청년 정책 패키지’ 개발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당장, 야당이 고수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예산 문제 등을 고려,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을 고집하기보다는 현행 학기제 등록금을 학점제 등록금으로 바꾸거나 소득격차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 하는 선별적 접근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효도법’을 차례로 선보이는 등 노인정책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로 민생 정당으로 달라진 새정치연합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다.

우선,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먹튀 자식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데, 증여 후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부모를 폭행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100세 시대’에 맞춰취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금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 지속가능하면서도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 만족할 연금 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연금을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연내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비노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이 어렵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주로 내놨지만 최근 들어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문 대표가 대

표직을 유지하되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는 일종의 ‘절충형’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 중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으면 10월 선대위를 구성, 공천 등 선거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 대표가 사퇴하면 당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천을 포함한 선거 전반 업무는 선대위에서 다루고 대표 등 지도부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신당의 원심력이 약화되자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조기 선대위를 구성, 문 대표 등 친노 진영이 공천에 간여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공천 혁신안을 만들면 친정계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 ‘혁신과 통합’을 함께 이루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 진영에서는 선대위 초기 구성은 현실적이지 않고 문 대표 등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김한길, 페이스북서 “창조적 파괴·새로운 도전 나서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지난 14일 양당체제의 극복을 강조하면서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도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당내 비주류의 대표적 인사일 뿐 아니라 당 안팎에서 분당 및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광복 70년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치는 광복 7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비전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립의 양당정치 체제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해 가진 선열들의 피와 땀의 토대 위에 건설됐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위해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정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성장을 위해 국민이 희생을 감수당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국가와 시장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언급과 관련, “당 내외 분들과 의견을 나누며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라고 여론을 남겼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문재인, 광복 70주년 기자회견... ‘경제통일’ 차기 집권 비전 제시

남북·북미 등 2+2 회담 제안

김무성 “이승만 국부 예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하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경제 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 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평화의 한반도로부터 시작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우리 자신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말했다.

특히, 그는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한다”며 “2+2 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저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표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수렴이 먼저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신인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광복 7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 “지난 70년은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역사였다”면서 “이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부로 예우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들을 모두 높이 평가해서 공정과 화해와 포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하고, 그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뤄서 진정한 광복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현, 최경환 부총리에 순천만정원 운영비 지원 요청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 지정이 확실시되는 순천만정원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대부족하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 4일자 1면)이 높은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순천만정원 운영·관리 예산 반영 확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요청한 예산은 순천만국가정원 관리와 수목·화초류 등 정원 보완, 조경시설·건축 등 시설관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국가정원과 정원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다.

이 의원은 최 장관과의 면담에서 “정원법 제4조에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



운영하는 정원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8조에서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순천만정원이 오는 9월5일 국가정원으로 선포되면 국가가 관리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도 “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정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구속 여부 이변주 초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변 주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부터 법무부, 대검찰청을 거쳐 일선 검찰청으로 전달된다. 지난 7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서를 최종 법원에 넘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후 기간인 14~16일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박 의원이 심문에 참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17~18일 이뤄지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1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천만원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